

모 두 발 언

2023. 4. 2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ESG 금융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논의주제

지난 2월,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이슈를 시의적절(timely)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ESG 금융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회의로서
크게 3가지 방향성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1) ESG 공시

: 해외 ESG 공시규제에 대응한 국내기업 지원 방안

첫째, 글로벌 ESG 공시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최근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EU지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대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편입되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 공시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ESG 경영 전환(transition)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어,
ESG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기준은 물론
ISSB와 같은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이중적인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월에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ESG 공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2) ESG 평가제도 개선

둘째, ESG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SG 공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activities)을 측정(measure)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라면,

ESG 평가제도(ratings)는 공시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ESG 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SG 평가기관 사이에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상이(divergence)하여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가기관들 스스로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컨설팅과 같은 자문서비스와 ESG 평가 간에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ESG 투자 및 리스크 관리 : 기후 금융과 탄소배출권 시장

일련의 ESG 금융 생태계의 마지막 단계는

ESG 공시와 평가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제 실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 대응 문제입니다.

기후 리스크는

기후 이상에 따른 직접적인 물리적 위험이나,

전환 리스크를 통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리적리스크) 이상기후로 인한 물적 피해가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에 파급(예 : 보험지급금 증가)되는 리스크

(전환리스크) 저탄소경제로 이행과정에서 화석연료 · 탄소多배출 산업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

기후 이상과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stress test)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후 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사회의 탄소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금융’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시장참여 확대,

파생상품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이

‘균형(equilibrium) 탄소가격 형성과

이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라는

당초 제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ESG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새로운 가치(value)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SG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간 협업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ESG 금융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회의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